

2007년 북한의 신년사 : 분석과 전망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김영운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영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재진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분석 : 경제강국 건설 강조

- 2007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전체적으로 전통적 형식과 내용을 반복하는 가운데, 2006년을 ‘강성 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해로 규정하고, 2007년에는 ‘핵억제력 보유’를 바탕으로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주창함.
 - 핵문제, 6자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언급 전무
 - ‘선군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고, ‘려명’이라는 용어도 수년전부터 사용됨.
- 대내정책으로는 선군정치 지속강조, 경제발전 주력, 국방력 강화노력 지속, 김정일 이상화, 사회 통합을 위한 사상교양 강조 등 예년의 신년공동사설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금년에는 특히 주민생활 향상에 국가적 힘을 집중할 것을 천명함.
 - 선군정치를 펼쳐온 것이 선견지명 있는 선택이었음을 강조
 - 그러나 대내 경제관리개선조치나 대외 경제개방 강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는 바, 국가통제적 자력갱생 노선을 시사함.
- 대남관계에서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2007년 3대 과업으로 제시하여 핵실험이후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위기상황 돌파와 남북경협을 통한 실리확보 그리고 남한 대선과정에서의 적극 개입의사를 보임.
 - 거족적인 미군철수투쟁과 ‘반보수대련합’을 재강조하는 등 대남 통일전선사업에의 적극적 의지 표출
- 대외관계에서는 ‘자주·평화·친선’의 일반적 기조를 언급하는 가운데 ‘진보적 인민들과의 연대성 강화’를 강조함.
 - 대미관계는 ‘반미자주’투쟁과 ‘주한미군철수’를 강조하는 데 그침.

- 따라서 2007년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을 기본 토대로 삼고,
 - 사회주의 원칙 고수 및 실리추구에 기초한 대내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 ‘민족중시, 반보수대연합’ 등의 구호를 중심으로 상·하층부 대남 통일전선사업과 남한 대선과정 개입에 적극 나설 것이며,
 - ‘평화수호’ 구호 하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에 대해서는 협력·협박 병행정책(Tit for Tat)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2. 전망 : 선군정치에 기초한 버티기전략 추진

- 2007년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정책은 북핵 포기과 개혁·개방전략을 선택하기 보다는 선군정치에 기초한 버티기 전략(Muddling Through)에 근거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정치 부문에서 선군정치를 통한 김정일 ‘절대화’를 지속할 것임.
 - 김정일 출생 65돐(2.16), 김일성 출생 95돐(4.15), 인민군 창건 75돐(4.25), 김정일 공화국원수 추대 15돐(4.20), 김일성 ‘5·25 교시’ 40돐, 공청 80돐(8.28),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10돐(10.8) 등을 맞아 김정일 권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행사를 개최할 것임.
 - ‘혁명의 3·4세’용어가 언급되지 않았는 바, 김정일 후계문제는 대두되지 않을 전망이다.
 - ‘5·25 교시’ 강조는 향후 김정일 노선에 소극적인 관료들을 척결하기 위한 ‘중앙당 검열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 놓음.
- 경제 부문에서는 군사강국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자력갱생을 강조할 것임.
 - 대내 경제부문에서는 경제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대외적 경제제재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 추진을 강화
 - 대남 경제부문에서는 남한으로부터 식량·비료 등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경협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
 - 대외 경제부문에서는 대중국 변경무역 활성화와 국제시장에서의 금거래 활성화를 시도할 가능성 있음.
-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선군정치를 통한 체제안정화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사상통제와 사상교양을 어느 해 못지않게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의 수해 후유증, 유엔안보리 제재로 인한 경제난 가중 등 상황 악화에 따른 사회질서 이완을 억제하고,
 -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한층 강화할 것임.
- 군사부문에서는 ‘평화수호’ 명분하에 대남군사 태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큼.
 - ‘국방공업발전’을 통한 군사력의 물리적 기초를 핵무장 능력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 군대에 대한 전투준비와 전투력 제고를 위한 정치사상적 훈련을 강조할 것임.
- 한편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이를 미국에 대한 책임전가 기회로 활용하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 강조 →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 → 한반도 전쟁분위기 고조 →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이분법의 2007년 대선구도 창출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대남부문에서는 협력과 통전의 이중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
- ‘민족중시’를 통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안전판 확보와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 ‘평화수호’를 통해 주한미군철수 운동전개를 위한 단초를,
 - ‘단합실현’을 통해 남한 대선정국을 맞아 ‘반보수대연합 실현을 통한 친미반동보수세력 매장’ 투쟁을 강조할 것임.
- 대외부문에서는 ‘핵보유국’ 기반 위에서 ‘반제자주 투쟁’을 견지하되, ‘인민외교’에 기초한 실리외교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핵보유국’ 자신감위에 2007년 북한은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 외부자원 동원을 위한 실리외교 추진이 필수적임.
 - 따라서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대외관계 확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강화와 더불어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도 실리 획득을 위한 ‘인민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